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¹⁾

- 농어를 제외한 전국 가구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2008년 또는 2009년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화하는 추이를 보임

- 빈곤율과 지니계수 증가율은 기준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시장소득 기준 증가율이 가처분소득 기준 증가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함. 이는 예산제약하에서 시장소득 분배 개선에 정책역량이 집중될 필요성을 시사함

1. 절대적 빈곤율 추이

□ 2인 이상 전국 비농어의 절대적 빈곤율(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측정한 절대적 빈곤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높아지다가 2010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7.8%에서 2009년 10.9%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0.0%로 감소
 -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6.1%에서 2009년 7.0%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6.3%로 감소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6.9%에서 2009년 8.1%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7.1%로 감소
 -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7.8%에서 2009년 13.3%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0.0%로 감소
 -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3.9%에서 2009년 7.4%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5.1%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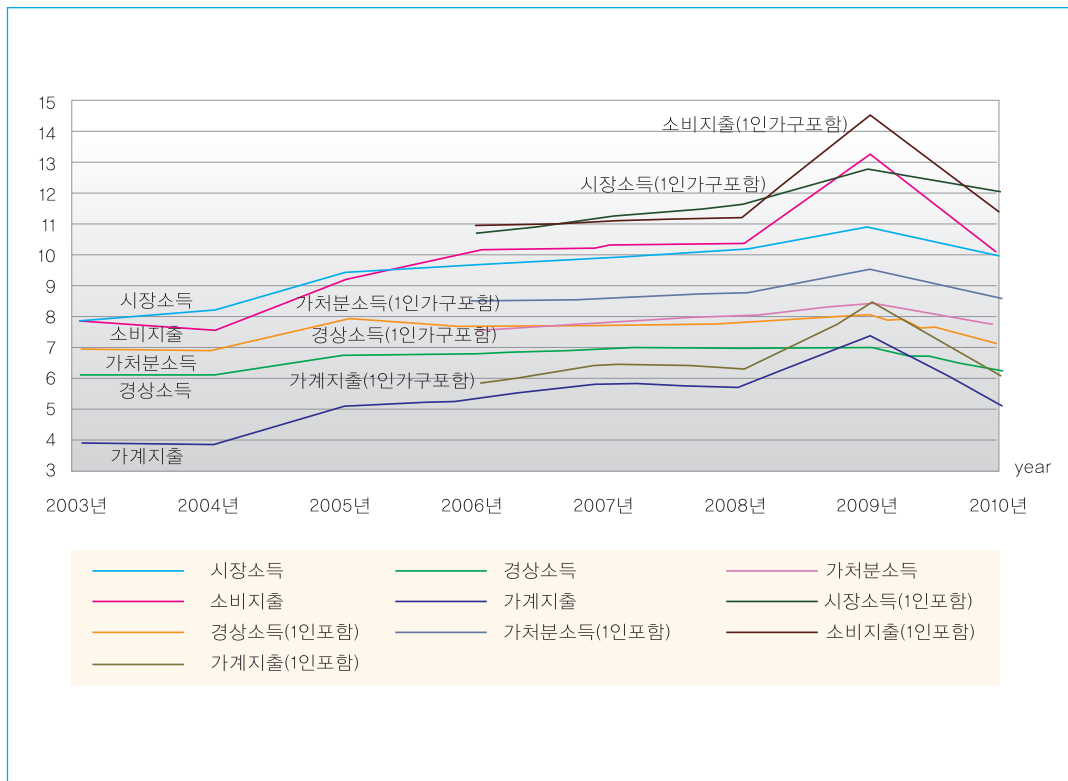
□ 1인 가구가 포함된 전국 비농어의 절대적 빈곤율(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

- 1인 가구가 포함되면 빈곤율이 약 1~2%정도 더 높아짐.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단독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절대적 빈곤율은 2006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에 다소 감소하였음

1) 본고에서 이용한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김문길·김태완·박신영·이병희·임병인·이서현(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의 결과를 인용하였고, 기술 내용은 김문길·김태완·이서현(2012),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보건복지포럼』을 주로 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0.7%에서 2009년 12.8%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2.1%로 감소
-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7.6%에서 2009년 8.4%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7.8%로 감소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8.5%에서 2009년 9.5%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8.7%로 감소
-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10.9%에서 2009년 14.6%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11.4%로 감소
-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6.0%에서 2009년 8.5%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에 6.2%로 감소

[그림 1] 절대적 빈곤을 추이



〈표 1〉 절대적 빈곤을 추이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2003	7.8	6.1	6.9	7.8	3.9
2004	8.2	6.1	6.9	7.6	3.9
2005	9.4	6.8	7.9	9.3	5.1
2006	9.7	6.8	7.7	10.1	5.3
2007	10.0	7.0	7.7	10.3	5.9
2008	10.2	7.0	7.8	10.3	5.7
2009	10.9	7.0	8.1	13.3	7.4
2010	10.0	6.3	7.1	10.0	5.1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6	10.7	7.6	8.5	10.9	6.0
2007	11.2	7.8	8.6	11.1	6.6
2008	11.6	8.0	8.8	11.2	6.5
2009	12.8	8.4	9.5	14.6	8.5
2010	12.1	7.8	8.7	11.4	6.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 상대적 빈곤을 추이

□ 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 2인 이상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3년 이후 다소의 등락을 거치며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나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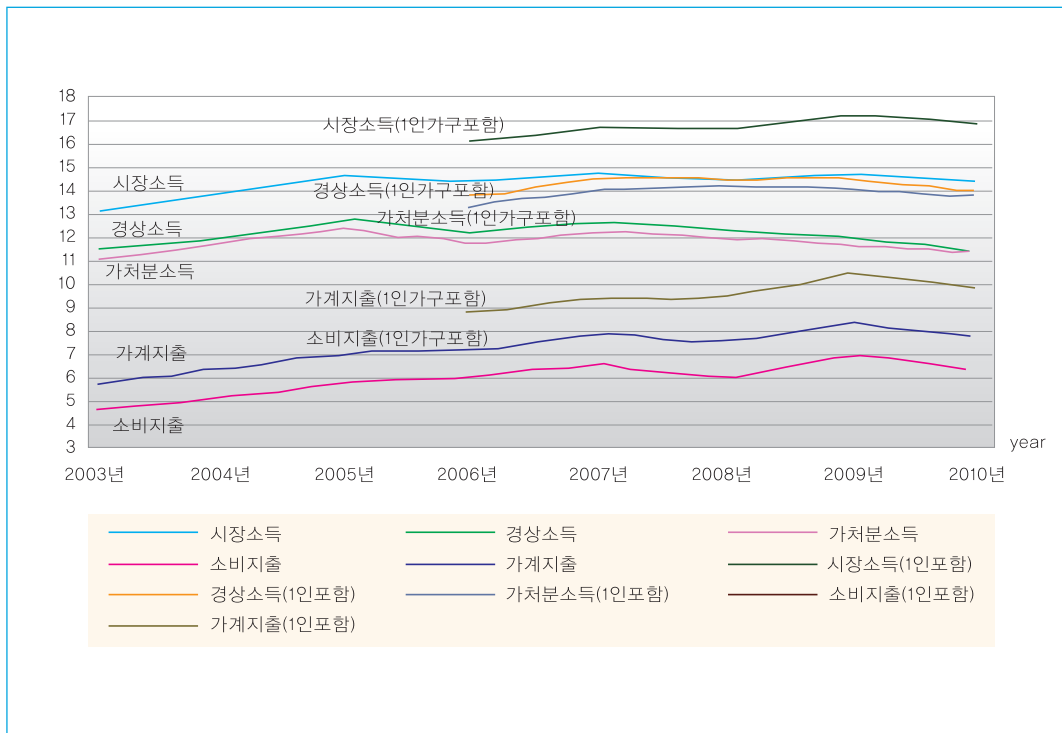
-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13.1%에서 2007년 15.5%로 증가, 2008년 15.0%, 2010년 14.9%로 감소
-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11.5%에서 2007년 13.1%로 증가, 2008년 12.9%, 2010년 12.1%로 감소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11.1%에서 2008년 12.6%로 증가, 2010년에 12.0%로 감소
-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4.6%에서 2009년 7.6%까지 증가, 2010년에 6.9%로 감소
-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5.8%에서 2009년 8.9%까지 증가, 2010년에 8.4%로 감소

□ 1인 가구가 포함된 전국 비농어가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2~3%p 정도 더 높은 수준에서 증가 후 2010년에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6.1%에서 2009년 17.3%로 증가, 2010년 17.0%로 감소
-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3.8%에서 2009년 14.6%로 증가, 2010년 14.0%로 감소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13.4%에서 2009년 14.1%로 증가, 2010년에 13.8%로 감소
-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7.6%에서 2009년 9.0%까지 증가, 2010년에 8.4%로 감소
-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8.8%에서 2009년 10.5%까지 증가, 2010년에 9.9%로 감소

[그림 2] 상대적 빈곤율 추이



〈표 2〉 상대적 빈곤율 추이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2003	13.1	11.5	11.1	4.6	5.8
2004	13.8	12.1	11.8	5.2	6.4
2005	14.7	12.8	12.4	5.9	7.1
2006	14.8	12.8	12.1	6.5	7.7
2007	15.5	13.1	12.6	7.0	8.4
2008	15.0	12.9	12.6	6.3	8.0
2009	15.4	12.8	12.2	7.6	8.9
2010	14.9	12.1	12.0	6.9	8.4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6	16.1	13.8	13.4	7.6	8.8
2007	16.7	14.6	14.1	8.1	9.4
2008	16.7	14.5	14.1	7.8	9.4
2009	17.3	14.6	14.1	9.0	10.5
2010	17.0	14.0	13.8	8.4	9.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 불평등도 추이

□ 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의 지니계수

○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는 소득기준으로는 2003년부터 증가하다가 2008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지출기준으로는 2003년부터 증가하다가 2008년과 2010년에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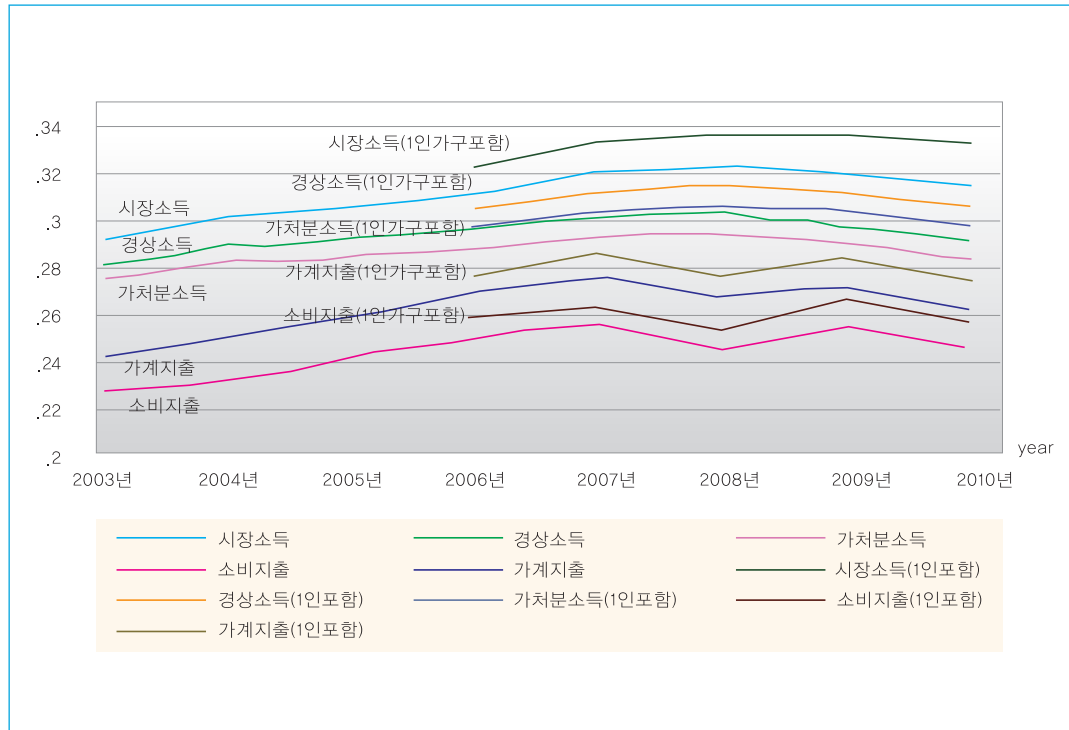
-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0.292에서 2008년 0.323으로 증가, 2010년 0.314로 감소
-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0.281에서 2008년 0.303으로 증가, 2010년 0.283으로 감소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3년 0.275에서 2008년 0.294로 증가, 2010년에 0.283으로 감소
-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0.226에서 2009년 0.255로 증가, 2010년에 0.245로 감소
-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3년 0.241에서 2009년 0.272로 증가, 2010년에 0.262로 감소

□ 1인 가구가 포함된 전국 비농어가의 지니계수

○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0.323에서 2008년 0.337로 증가, 2010년 0.332로 감소
- 경상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0.305에서 2008년 0.315로 증가, 2010년 0.306으로 감소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06년 0.297에서 2008년 0.306으로 증가, 2010년 0.298로 감소
- 소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0.258에서 2009년 0.266로 증가, 2010년 0.256으로 감소
- 가계지출 기준으로는 2006년 0.276에서 2009년 0.284로 증가, 2010년 0.274로 감소

[그림 3] 지니계수 추이



<표 3> 지니계수 추이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인 이상 비농 전국가구					
2003	0,292	0,281	0,275	0,226	0,241
2004	0,301	0,289	0,282	0,231	0,250
2005	0,306	0,292	0,285	0,241	0,257
2006	0,312	0,296	0,288	0,251	0,269
2007	0,321	0,302	0,293	0,255	0,276
2008	0,323	0,303	0,294	0,244	0,267
2009	0,320	0,297	0,290	0,255	0,272
2010	0,314	0,291	0,283	0,245	0,262
1인 포함 비농 전국가구					
2006	0,323	0,305	0,297	0,258	0,276
2007	0,333	0,312	0,303	0,263	0,285
2008	0,337	0,315	0,306	0,253	0,277
2009	0,336	0,311	0,304	0,266	0,284
2010	0,332	0,306	0,298	0,256	0,27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4. 빈곤, 불평등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 빈곤, 불평등 변화의 특징

-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2003년 대비 2010년 빈곤율과 지니계수 모두 시장소득 기준의 변화율이 경상소득이나 가처분소득 기준의 변화율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음.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에도 2006년 대비 2010년 빈곤율과 지니계수 모두 역시 시장소득 기준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인 이상 가구의 2003년 대비 2010년 변화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절대적 빈곤율의 변화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8.2%,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8%로 약 20%p의 격차가 발생
 -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9.9%,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7%로 약 7.2%p의 격차가 발생
 -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7.5%,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9%로, 약 4.6%p의 격차가 발생
- 이 같은 결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발견 또는 유추할 수 있음
 - 첫째,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공적 이전소득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임
 - 둘째, 시장소득 기준 변화율과 가처분소득 기준 변화율 간의 격차가 클수록 재정지출에 의한 빈곤, 불평등 완화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재정지출은 불평등 완화보다 빈곤완화에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의 절대적 빈곤율은 동 기간동안 33.2%나 증가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의 절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3.0% 감소하여, 재정지출에 의한 빈곤 완화효과가 전가구에 비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상대적 빈곤율도 전가구에 비해 두 소득기준간 변화율의 차이가 더욱 크지만, 지니계수의 경우는 두 소득기준간 변화율은 전가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표 4〉 빈곤율, 지니계수 변화율

(단위: %)

구분		전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시장소득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시장소득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절대적 빈곤율	2인 이상 (2003년→2010년)	28.2	2.8	33.2	-3.0
	1인 포함 (2006년→2010년)	13.4	2.3	18.6	-5.5
상대적 빈곤율	2인 이상 (2003년→2010년)	9.9	2.7	10.1	1.2
	1인 포함 (2006년→2010년)	5.5	2.9	3.6	-3.2
지니계수	2인 이상 (2003년→2010년)	7.5	2.9	7.1	2.7
	1인 포함 (2006년→2010년)	2.7	0.3	2.1	0.3

자료: 김문길 외(2011), 『2011년 빈곤통계연보』

□ 정책적 시사점

- 재정지출에 의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지만, 시장소득의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사실은 재정부담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
 -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음에 따라 사회보험의 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한 상황에서 시장소득의 빈곤과 불평등 심화는 소득보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공공부조의 재정부담을 더욱 크게 할 것임
 - 특히,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고령화는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직면해 시장소득 증가와 시장소득 분배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 활성화(activation) 정책에 정책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수 있음
 - 유연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네덜란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소득 불평등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²⁾를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임
- 한편,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전가구의 빈곤율과 불평등지수가 높다는 점, 그리고 재정지출의 빈곤완화 효과가 도시근로자가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으로부터,
 -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인구유형 또는 계층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보장성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김문길(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02-380-8354)

²⁾ OECD(2008), Growing Unequal · pp.31-3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